

홍천 438억원 규모 지역건설사업 발주

홍천군이 해빙과 동시에 438억원 규모의 지역건설사업을 발주한다.

홍천군은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74억원을 비롯 하천정비 110억원, 농업기반정비 56억원, 소규모지역개발 98억원 등 377건 438억원을 투입, 지역건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이달 중 군도 정비 8건, 농어촌도로정비 17건, 하천정비 14건, 농업기반정비 10건, 농업용수로개량 41건, 생활용수개발 1건, 암반관정 5건, 소형관정 162개소, 마을안길포장 38건, 배수로설치 40건, 교량 및 암거설치 19건, 마을회관신축·보수 3건, 행복한 우리마을조성 3건, 기타사업 16건 등 모두 377건을 설계 완료해 해빙과 함께 동시에 발주해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홍천/유주현 joohyun@kado.net

최동용 춘천시장-김진태 의원 정책 협의

내년 국비 확보 논의

최동용 춘천시장과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11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최 시장과 김 의원은 제2경춘국도 신설, 도시재생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신축, 애니메이션박물관 리모델링 등 16건을 국비 확보 중점 사업으로 선정, 예산 편성 초기단계부터 공조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 시장은 “정부 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월이면 완성되는 부처 예산안에 최대한 많은 현안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책협의회는 민선 6기 출범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 정례화돼 이번을 포함 총 4차례 이뤄졌다. 춘천/김정호

춘천시, 산단 시설 개선

춘천시는 9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5억원)보다 80% 증가한 금액이다. 퇴계농공단지 차도와 인도가 정비되고, 창촌농공단지에서는 담장 철거, 펜스와 사면 정비 등이 진행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에서는 우수관로 준설이 이뤄진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춘천시 2626억 조기집행

춘천시는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2626억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조기집행 대상으로 규정한 춘천시의 사업 예산 4775억원의 55%수준이다.

조기집행 예산은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 사회기반시설 등에 쓰인다.

춘천/김정호 kimpro@kado.net

올 도로 안전확보에 1.5兆 투입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로 시설물 안전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시설 확충에 1조 5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안전예산 1조4808억원보다 2.8% 증액된 것이다. 2014년(1조426억원)과 비교하면 5000억원 정도 많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량, 터널 안전점검에서 결함이 발견된 930개소를 조기 보수하고, 파손된 도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한다. 교량개축 17개소, 저등급교량 성능개선 18개소, 홍수취약교량 13개소가 개선 대상이다.

특히 오는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중앙분리대·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가 진행된다.

서해대교 주탑 케이블 화재사고를 계기로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안전 기준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낙뢰, 화재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특별팀(TF)이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중부·영동선 시설 전면개선 100m 이상 교량 내진보강 사고 알림 서비스도 확대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도 연내 마무리된다. 국토 총 6662개 교량의 86%(5705개교)와 모든 터널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규모가 작고 비위험지대에 있는 957개 교량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3000m 이상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로에 대한 방재기준도 상반기 중 정비한다.

사고예방 시설도 대폭 늘린다. 교통안전 투자를 2297억원에서 2567억원으로 확대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산사태 위험지(24개)이나 역주행(13개), 산사태(530개), 마을주변 국도 보행자 사고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대응하는 맞춤형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한다.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시설, 안개대비 안전시설, 가로등 등 안전시설 파손 시 즉시 보

수할 수 있도록 정비예산을 11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또 국민이 도로재난 상황을 직접 경험해보고 대피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경부선 영동군 용산면 영동터널에 '터널방재 체험장'을 만든다. 연말까지 규모, 구비시설 등을 설계 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사고 즉시 알림 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 아이나비, 실시간 경로안내(MBC-TPEG)에 이어 올하는 KT-올레내비, SK-티맵 등이 추가된다.

7월부터는 낙하물이나 앞차의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뒤차량에 알려주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대전~세종간 시범구간에서 3000대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재난재해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도로안전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안전개선 효과가 높은 정책도 적극 발굴해 사고 걱정 없는 든든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건설사에 개발부담금 부과때 개발비용 최대한 공제해줘야”

토지개발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거둬들이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건설사가 개발에 들인 '비용'을 최대한 감안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송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건설사들의 이익이 짊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3부는 최근 “(개발부담금 징수를 위해)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는 가능한 한 실제에 가깝도록 산정해 모든 개발비용을 공제함이 마땅하다”며 항소심을 파기해 돌려보냈다. 항소심은 건설사가 추가로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의 원고인 원정건설은 지난 2009년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치고 피고인 충청남도 홍성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 5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관할 행정청에 납부도록 하는 제도다.

공사를 시작할 때보다 공사를 마친 시점의 땅값이 더 비싸지면 이를 개발이익으로 본다.

물론, 개발이익 액수 중 공사비·설계비·각종 부담금 등 공사하는 데 필요한 '개

대법 “실제 발생한 이익만 환수하는게 法 취지 맞아”

발비용'은 빼준다.

학교용지부담금도 이 개발비용에 해당한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건설사는 토지개발 시 담당 지자체에 학교용지확보 비용을 무조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출되는 시점이 제각각이라 '개발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 등의 분양을 마친 후에 그 분양가의 일정액을 내는 시스템이다. 분양이 실제로 진행돼야 학교용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비나 설계비는 공사종료(준공인가) 전에 지출해 개발비용으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사건에서 원정건설도 뒤늦게 분양이 체결되는 바람에 학교용지부담금 1억 8000여만원을 2009년 12월부터 2011년 6월에 걸쳐 납부했다. 홍성군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은 이후 시적이다.

이에 원정건설은 이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에서 1억8000여만원을 공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홍성군은 거부했다. 원정건설은 홍성군의 거부행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정건설이 이 같은 신청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원정건설 입장에서 개발에 쓴 돈이 적게 인정돼 그만큼 '개발부담금'도 더 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그러나 대법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분양계약이 늦어지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절차가 마쳐지지 않아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시 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는 마땅히 공제받아야 할 개발비용을 전혀 공제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현 개발이익 환수법령은 그 불복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준조세 성격의 개발부담금 제도를 이용해 '세수 확보'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실제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해야 하는 게 제도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윤석기자 ysys@

국무회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무니만 회사차' 논란을 불러일으킨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구·안경 소매업자의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넣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결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업무용차, 年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 가구·안경 소매업자도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거래금액 10만원이상〉

업무용차 비용처리 얼마까지.

원칙적으로 연간 1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차 비용 포함 범위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차량의 취득·유지에 지출한 비용까지다.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 한도는.

매년 800만원이다.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청년 상시근로자 채용 추가 세제혜택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증가액을 계산할 때 청년(15~29세) 상시근로자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에 1.5배 가중치를 준다.

가구·안경 소매업자들도 앞으로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

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인가.

아니다. 수입의 일정 부분을 차등적으로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이하는 50%, 6000만원 이하는 30%, 6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0% 경비율이 적용된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가 제공한 식사 또는 월 10만원 이하 식비 등 실비 변상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종교인 퇴직금은 과세대상인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어떻게 바뀌나.

유가증권 시장과 비상장 주식의 경우

'지분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을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 선 지분을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민박, 음식을 판매, 양어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농어민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난다는데.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펀드 과세 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펀드에 편입된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 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 과세하도록 했다.

평창올림픽 개최를 위해 마련된 세제 지원 대책은.

평창올림픽을 비롯한 국제경기대회의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했다.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 시동

신축부지 감정 완료... 보상 착수

원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본격화한다. 11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교도소 이전 신축 부지인 봉산동 255일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보상에 착수,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 예정지 17만3239㎡의 보상 대상은 토지 117필지, 지장물 118건, 분묘 45기 등이며, 보상 대상 지주는 153명으로 파악됐다. 보상액은 당초 76억원으

로 예상됐지만 감정평가 결과 120억원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원주교도소는 보상이 마무리된 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19년 완공될 예정이다. 건물 연면적 4만1000㎡에 수용인원 110명 등으로 현재 원주교도소보다 부지는 1.5배, 건물은 1.9배로 건립된다. 총사업비는 1100억원 정도로 전액 국비로 투입된다.

원주교도소는 1979년 무실동에 들어

섰지만 무실동 일대가 발전하면서 교정 시설이 시내 중심에 자리 잡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에 2005년부터 이전 사업이 추진돼 2013년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됐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 결과 보상액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부에 44억원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사업이 본격 시작된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훈기자

도로교통공단, 원주혁신도시 신청사 개칭

도로교통공단이 12일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칭식을 갖는다.

개칭식에는 강신명 경찰청장, 김기산·이강후 국회의원, 김기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지상 12층, 연면적 2만1280㎡ 규모로 태양광발전·지열 냉난방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았다. 2012년 11월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했으며 건립에 660억원이 투입됐다. 이전 인원은 308명이다.



한편 원주혁신도시는 부지 359만6000㎡에 8843억원을 들여 부지조성을 마쳤고,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한다. 2월 현재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김태형기자

A20 평창동계올림픽 준비 어떻게 되고 있나

제15098호 2016년 2월 12일 금요일 건설경제

테스트 이벤트 본격화... 신·개축 8개 경기장 모두 착공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
공정률 64.55%로 가장 빨라
강릉지역 내년 대부분 완공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기존 9곳, 올해 말까지 완료
추가 7개 노선, 발주 대기
광역교통망도 착착 진행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2년 남짓 남은 가운데 첫 테스트 이벤트인 2016 아루디 국제스키연맹(FIS) 스키월드컵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6~7일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16개국, 196명의 선수단은 운영 측면에서 합격점을 줬다. 구닐라 린드버그 IOC 조정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100점을 주기 어렵지만 100점을 주고 싶다"고 극찬했다. 오는 18~28일 평창 보광웨닉스파크에서는 두 번째 테스트 이벤트인 FIS 스노보드-프리스타일 스키월드컵이 열린다.

올림픽 개최에 앞서 공식 시험무대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장 건설 등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해봤다.

평균 공정률 53%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은 설상 7개, 빙상 5개 등 총 12개다. 이 가운데 강원도는 8개의 경기장을 신·개축하고 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슬라이딩 센터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센터 등이다. 나머지 용평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4개 경기장은 올해 국제대회 규격에 맞게 개선된다.



드스케이팅 경기장 △강릉 아이스 아레나 △강릉 하키센터 △관동 하키센터 △강릉 컬링 센터 등이다. 나머지 용평 알파인 경기장, 알펜시아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4개 경기장은 올해 국제대회 규격에 맞게 개선된다.

8개 신·개축 경기장 중 사업비 확정 문제로 지연됐던 컬링센터 개축공사가 지난해 말 시작하면서 모든 경기장이 순조로운 공정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현재 전체 공정률은 53%에 이른다. 이는 개 동계올림픽 본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곳은 2013년 12월 착공한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다.

올림픽 경기장 위치



빙상 레이·루자·스켈레톤 종목이 개최되는 슬라이딩 센터는 현재 64.55%의 공정률로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이번 테스트 이벤트가 열렸던 정선 알파인 경기장도 2014년 5월 착공해 현재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빙상 종목이 몰려 있는 강릉지역 경기장은 대부분 내년 완공된다. 관동 하키센터(61.4% 이하 공정률)가 내년 10월 완공을 시작으로 아이스 아레나(55.9%), 강릉 하키 센터(58%), 컬링 센터(4.5%)가 내년 11월 완공된다. 컬링 센터는 상대적으로 진척이 느리지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라 예정된 준공은 문제없



을 것으로 본부는 내다보고 있다. 사후 활용 문제로 지난해 5월 착공한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27.7%)은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이 밖에 보안 시설인 보광 스노보드 경기장은 현재 25.1%의 공정률로 2017년 6월 완공 예정이다. 개·폐회식장인 올림픽 플라자는 오는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5월부터 토목공사에 나선다.

테스트 이벤트 후 최문순 강원지사는 "당초 빠듯한 공사기간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성공적으로 대회 준비를 마쳤다고 자부한다. 특히 FIS로부터 경기장에 대한 이례적인 찬사를 받으면서 모든 관계자들

이 경기장 준비에 한층 탄력을 받아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접근성 문제 해결도 속도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도 순조롭다. 현재 16개 도로 중 기정 9개 노선의 전체 공정률은 31%로 대부분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사업인 지방도 456호선 진부~황계IC(7.20km)과 408호선 면원IC~보광(5.48km), 지난달 20일 착공한 진부역 진입도로(9.03km)는 2017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추가 진입도로 7개 노선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발주대기하고 있다. 오는 4월 착공해 2017년 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도 456호선 월정3거리~차항(7.20km·619억원), 군도 12호선 유천~용산(2.92km·149억원), 진부IC~호명교(2.65km·307억원), 대관령 우회도로 차항~황계(3.42km·287억원), 선수촌~강릉 빙상 경기장(2.20km·181억원), 국도 7호선 강릉원주대~축현교차로(1.50km·211억원) 등이 조만간 발주된다. 강릉역~강릉 빙상경기장(0.42km·301억원)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상반기 내 입찰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광역교통망도 속속 속도를 내고 있다. 총 3조911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강릉(120.7km) 간 고속철도는 201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결 교통망인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145km)과 중부고속도로 호남~하남 구간(41km)도 새로 포장되고 2017년까지 안전시설물 등이 전면 개선될 예정이다. 정희훈기자 hoony@